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18 구묘역 안장 대상자 범위 논란 재점화

“5·18 관계자 한정 안장”...“민주열사까지 확장해야”

1987년 이한열 열사 때부터 논란...광주시 통합조례 제정에 다시 불거져 오월단체 “구묘역 정체성 잃어”...시민단체 “민주화의 상징 의미 살려야”

30여년 이어져 온 5·18 구묘역의 ‘안장 범위’ 논란이 재점화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가 제정되면서 ‘안장 범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세부적인 안장 기준을 세울 필요가 생기면서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5·18 통합 조례(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구묘역 안장 기준 및 절차, 구묘역 안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사항을 시장에게 정할 것을 명시했다.

5월 단체는 지속적으로 안장자를 5·18 관계자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민주 열사까지 안장자를 확장할 것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광주시 북구 망월동에 있는 5·18 구묘역은 1980년 5월 신군부가 5·18 희생자들의 주검을 청소차에 싣고와 처리하려고 조성한 공간이자 희생자들이 처음 묻혔던 시립묘지다.

1976년부터 광주시 시립묘지로 조성돼 왔으며 1980년 5·18 희생자 126구가 안장되면서 5·18 묘역으로서 굳어졌다. 이후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가 새로 마련되면서 희생자들의 묘는 이장됐다. 구묘역에는 총 497기의 묘소가 있으며, 5·18 관계자 153기(이장 조치된 가묘 142기 포함), 민주열사 60기(가묘 57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3기 등이 안장돼 있다. 당초 시립묘지였던 만큼 일반인도 229기 안장돼 있으며, 남아 있는 빈 묘소는 52기다.

민주열사 중에는 1987년 6·10민주항쟁 과정에서 산화한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를 시작으로 1991

년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분신한 박승희 열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분신한 최현열 열사, 박근혜 정부 시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열사 등이 묻혀 있다.

구묘역 안장 대상자 논란은 1987년 이한열 열사가 묻힐 때부터 37년째 이어져 왔다.

5월 단체 측은 안장 대상에 ‘민족·민주열사’에서 ‘5·18 및 관련 진상규명 등 활동을 한 인물’로 명시해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민주열사를 계속해서 안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5·18유공자보다 민주유공자의 비중이 더 커지고 구묘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우려에서다. 구묘역이 포화된 상태에서 민족민주열사를 계속 받다 보면 유공자들이 묻힐 곳이 없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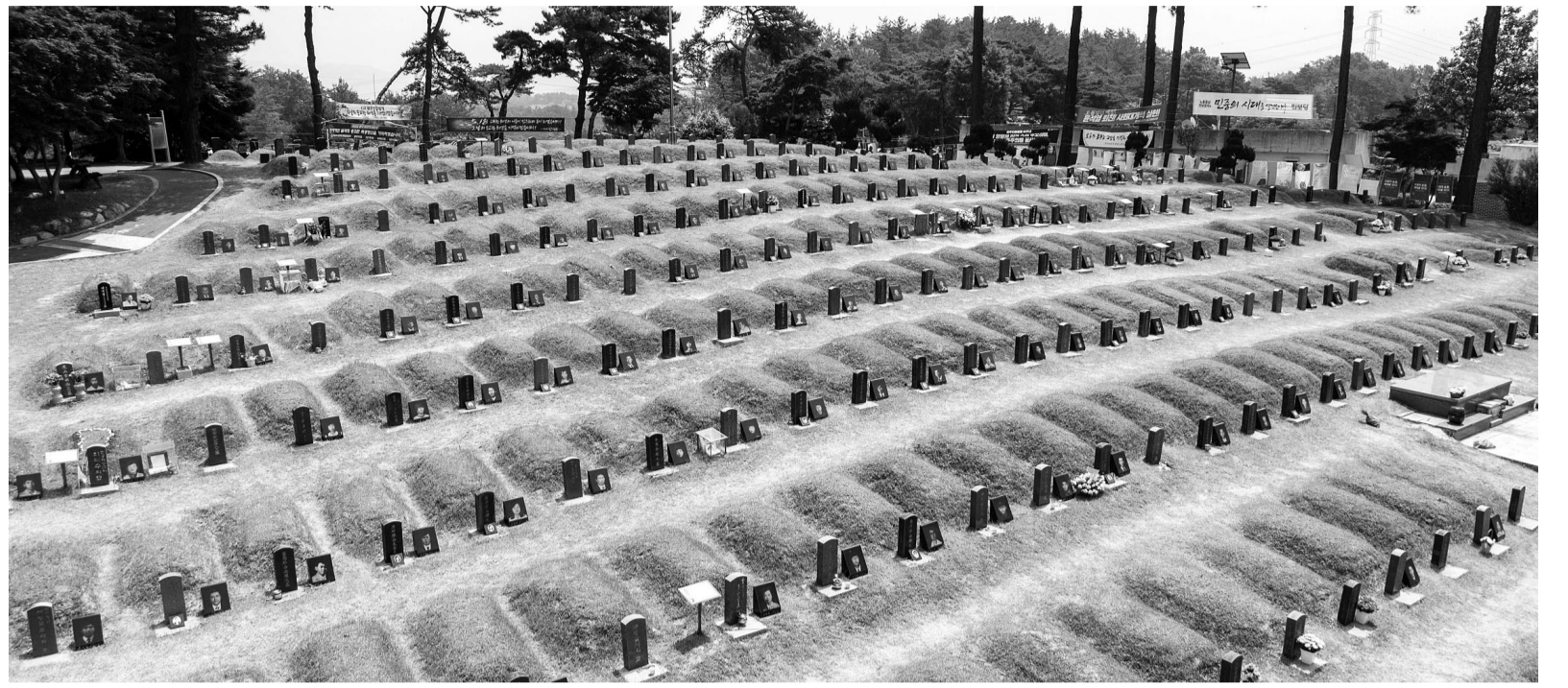
반면 광주전남추모연대 측은 이한열 열사 때부터 이미 5·18관계자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한 열사들을 함께 안장하고 있어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속적인 추가 안장을 통해 민주화 성지로서의 의미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묘역 안장 대상자는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심의 후 안장 결정해 왔으며, 내부 심의 기준만 있을 뿐 조례 등으로 법령화된 안장 기준은 없다. 기념사업위가 마련한 내부 심의 기준은 5·18 유공자, 민주화운동 활동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그

피해가 원인인 데 사망한 자, 민주화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 등 포괄적으로 돼 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5월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과 구묘역 시민전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이 때도 통합관리용 위치 조정, 국립5·18민주묘지와 연결되는 지하차도 신설 등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만 조율되고 안장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광주 시민단체는 5·18 유족과 광주시민, 오월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22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



5·18 영령과 민족민주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망월묘지공원 3묘역)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론회 ‘기억의 터로서 망월동 묘역을 다시 생각하기’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봉국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는 “망월묘역은 국가에 의해 배제되고 사회적 편견을 받던 자들의 장소였으며, 동시에 그들을 통해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이고 편협한 국가주의의 공공성의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임계점이었

다”며 “망월묘역에 잠든 ‘열사’들과 일상적인 사회적 틀, 규범, 가치로부터의 이탈을 감행했던 수많은 순례자들의 흔적은 5·18과 망월묘역이 결코 1980년 5

월엔 정박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추모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달 한차례 지속적인 민족민주열사 묘역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추모연대 관계자는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서 정체성을 세우자고 강하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5월 당사자와 시민 등과 시간을 갖고 설득해 나갈 문제라고 본다”며 “안장자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제노역 아버지의 한 풀어준 아들 日 가와사키중공업 상대 일부 승소

광주지법, 1538만원 배상 판결

일제와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아버지를 둔 60대 아들이 ‘강제노역의 한을 풀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22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1927~2015)씨의 아들 승익(66)씨가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와사키측에 승익씨에게 153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하고, 나머지 유족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은 광주·전남에서 처음 제기됐고, 승소도 첫 사례다.

승익씨는 지난 2020년 1월 14일 다른 형제 자매들 7명의 상속위임을 받고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아버지인 김씨가 1945년 2월부터 8월까지 일본 효고현 가와사키 차량주식회사로 끌려가 기관차와 무기 등을 만드는 일에 동원됐지만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와사키 측은 “가와사키가 강제동원했다는 증거와 김씨가 가와사키 중공업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강제동원 피해의 보상 가능성이 확인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보고 소송제기 이후 상속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서가 작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상속인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필로 남긴 경위서, 수기 문서 등과 당시 일제와 전범기업이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한 정황 등을 보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방화로 번진 이웃 갈등

장성서 이웃집 불 질러 4명 부상

60대 남성이 갈등을 빚던 이웃의 집에 불을 질러 4명이 다쳤다.

장성경찰은 A(6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장성군 한 주택 3층에 위치한 자신의 옆집에 인화물질을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A씨와 옆집에 거주 중이던 가족 3명 중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 가족들은 A씨가 설치한 건물물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었고, 이날도 같은 문제로 다투다 방화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가족이 군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한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 가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마트 대여 장애인 휠체어 손잡이 빠져 무빙워크서 고객 다치게 했다면?

법 “제동장치 안한 사회복지사 책임...매장 잘못 없어”

사회복지사가 대형마트 대여 휠체어에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무빙워크에서 휠체어 손잡이가 빠져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검찰은 매장 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회복지사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유신)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여·54)씨에게 벌금 2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형마트 점장 B(56)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13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주 지역 대형마트 매장의 무빙워크에서 휠체어 사용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해 다른 고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돕는 A씨는 이날 장애인들과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 A씨는 매장에서 휠체어를 빌려 장애인을 태우고 무빙워크로 이동하던 중 60대 고객에게 8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휠체어 손잡이가 빠지는 바람에 휠체어가 무빙워크 경사로를 타고 굴러가 피해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무빙워크에 탑승하면서도 휠체어를 돌리지 않고 제동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또 매장측이 휠체어 정기점검을 통해 고장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내방송과 안내표지판 부착 및 안전담뎁자를 매장 곳곳에 배치해 휠체어가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매장 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 경사로를 내려 갈 때는 휠체어 뒤쪽을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하고 보조자가 경사로 낮은 쪽에서 휠체어를 지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한다”면서 “A씨가 80kg의 장애인 성인 남성을 탑승시키면서 가파른 무빙워크에서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